

“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”... 교수들도 삭발, 사직서 던져

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

중대본,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3년 이하 징역, 면허취소 될수도

정부 ‘본보기’ 처분, 되레 반발 사
“같이 일하던 동료, 돌아올 길 요원
병원에 남아있을 이유 없어 사직”

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
직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
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.
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 7000여명에
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
고, 이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
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는다.

이런 가운데 정부와 강한 대치를 하
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
지키던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을
보이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욱
커졌다.

◆3개월 집단 면허정지 시작되나

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(행정
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)은 5일 의
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“수
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사직 후 병원
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
대한 증거를 전달 확보했으며, 이들에
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
이행한다”고 밝혔다.

중대본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기준
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



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 실습실이 텅 비어있다. 고려대 의대는 지난 26일 기준 예과 2학년~본과4학년 재적 학생 503명 중 95.23%인 479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까지 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~4년
차 9970명 중 90.1%인 8983명이 근무
지를 이탈했다. 사직서 제출자는 총
9981명이다.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
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.

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“금일
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
정”이라며 “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
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”고 밝
혔다.

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
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
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
을 예정이다. 이 외에도 3년 이하의 징

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
을 수도 있다.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
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
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
년여 미뤄진다.

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.
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
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
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 1심에서 집행유
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
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. 면허정
지 처분을 3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
된다.

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
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의사면

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울 전망이다.

◆“협박 과도하다” 교수들도 반발

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
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
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
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
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.

정부는 ‘본보기’ 처분을 통해 전공의
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, 되레 의
사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남아있다.
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전임의들
과 교수들까지 점차 단체행동에 동참하
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에
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.

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
5일 페이스북에 “전공의, 전임의 선
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
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.1배
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
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길
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”며 “그들
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고난도치
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
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”고 밝
혔다.

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모교의
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
삭발을 감행했다. 강원대는 전날 교육
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
신청서를 냈다.

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과 유운
중 의학과장 등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강

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
“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%
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해 총장에게
전달했지만 의대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
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”면
서 “젊은 전공의나 휴학계를 낸 학생들
에게 면목이 없다”고 토로했다.

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
지난 4일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
밝히며 “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
기하고 있고,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
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”며 지
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
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, 정부는 여론
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
결과와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”고 지
적했다.

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, 대체인
력 확충,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
원을 통해 병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
다. 복지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
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
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
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
있다고 밝혔다.

박민수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
해 “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
빠져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”
며 “전임의는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
있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
실 것이라고 믿는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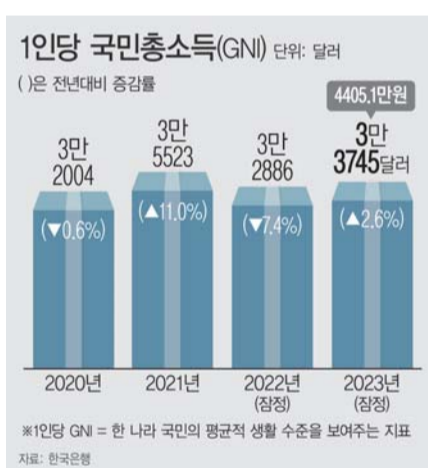
/이세경 기자 seilee@metroseoul.co.kr

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... 2.6% 증가

한은, 작년 4분기·연간 국민소득
원화기준 4405만1000원, 3.7% ↑
실질 국내총생산 전년비 1.4% 성장

2022년 원화까지 하락으로 7% 이상
줄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(G
NI)이 지난해 3만 3745달러까지 증가
한 것으로 나타났다. 실질 국내총생산
(GDP)도 같은기간 1.4% 성장했다.

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2023년 4분
기 및 연간 국민소득(잠정)’에 따르면
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은 3만
3745달러로 2022년(3만2886달러)대비
2.6% 증가했다. 원화 기준으로는 4405
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3.7% 늘었다.
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
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수치로, 국민
의 호주머니 사정을 파악하는 대표적



인 지표다.

한국은행 관계자는 “원화 기준 2236
조3000억원,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
로 전년보다 각 3.4%, 2.4% 성장했다”
며 “2022년과 비교해 원·달러 환율이 안
정되며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했다”

고 설명했다.

1인당 GNI는 2017년(3만1734달러)
처음 3만달러에 들어섰다. 2018년 3만
3564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(3만
2204달러), 2020년(3만2004달러) 2년
연속 뒷걸음치다 2021년 코로나19 충격
에서 회복되며 3만5357달러로 큰폭 올
랐다. 이후 2022년 원화까지 하락으로
7.4% 감소했지만 또 다시 반등했다.

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
년 대비 1.4%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.
4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.6% 성장해
속보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부문별 성장률은 건설투자가(-4.
5%)가 속보치보다 0.3%포인트(p) 낮
아진 반면 수출(3.5%), 수입(1.4%), 설
비투자(3.3%)는 각각 0.9%p, 0.4%p,
0.3%p 높아졌다. /나유리 기자 yul115@



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(재난안전관리본부장)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
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
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. /뉴스

전국 40개 의대서 3401명 증원신청

비수도권 의대 27곳서 73% 차지
서울서 365명, 경기·인천 565명

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
넘어 3401명으로 집계됐다. 정부 목표
치인 2000명은 물론, 지난해 수요조사
최대치도 넘어섰다. 이중 지방 의대 27
개교가 73%를 차지했다.

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
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
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“교육부가
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의대 정
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 보유 대
학 40개교 모두가 모두 3401명의 증원
을 신청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평가인
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
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
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게 재확인
된 셈”이라고 말했다. 교육부가 지난해
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증원 신
청 예상 수요조사에서는 최소 2151명,

최대 2847명으로 나온바 있다.

전체 증원 신청 규모 중 비수도권 27
개 의대에서 신청한 증원 인원은 2471
명으로 72.6%를 차지했다. 수도권 13
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
다.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, 경기·인
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이다.

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 의
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
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
다. 총신청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크게
상회했지만,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정
부가 더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다. 박 조
정관은 “총증원 범위인 2000명 내에서
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할
것”이라며 “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
와 교육역량,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
필요성,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
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
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”
이라고 밝혔다. /이현진 기자 ihj@

카카오모빌리티, 택시 상생안 조치 없어

>> 1면 ‘여론만 잠재운 카카오’서 계속

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
상생안을 마련했지만, 이 역시 제대로 이
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.

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가맹 택시
에 호출을 맡아주는 ‘콜 맡아주기’ 문제
로 규제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
는 등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주요 택

시단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했다. 하지
만 택시조합은 해당 상생안이 논의된
지 두달 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후속
조치를 촉구했다.

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
택시노동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 4일
“상생합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속
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”는 내용
의 성명을 발표했다. /구남영 기자 koogija_tea@

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“시스템을
개발하고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
걸린다”며 “상반기 중 이행하기로 한 것
에 대한 계획은 변동 없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카카오 외부 감시기구인 ‘준법
과신뢰위원회’가 내부 논란에 대한 문
제를 제기하기로 했다. 카카오 준신위
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‘스톡옵션 논란’
CTO 내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
로 알려졌다. 이에 전 CTO 내정에 대해
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.